

청년고용의 현실과 정책방향

윤 윤 규*

2018년 한 해 동안 청년고용 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우리의 청년고용 현실은 여전히 낮은 고용률, 늦어지는 노동시장 진입, 높은 체감실업률, 과도한 취업준비 활동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8년 42.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여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40% 초반대로 OECD 평균보다 10%p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불완전취업, NEET 등 잠재적 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하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공식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청년고용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이에 따른 중소기업 기피, 저성장·저고용기조 지속, 고학력화 및 과도한 취업준비 등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다.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세대’라는 표현처럼 청년고용 문제는 질적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단기일자리 증가 등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심화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주거·연애·결혼·출산·육아 등 생애단계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현실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체로도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에 따른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인적자본 축적 저해,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정체라는 중소기업의 취약성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임금지불능력 저하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와 이에 따른 일자리 수급격차가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청년들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인력난 지속이라는 모순적 현실이 공존하고, 청년들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잦은 이직과 짧은 근속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 경제 및 고용 지표가 전반적인 부진을 면하지 못한 가운데 청년 고용 지표에서는 개선의 흐름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추구하는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70.2%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7%p 하락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y27@kli.re.kr).

청년고용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짧은 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청년고용 지표의 개선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적극적인 청년고용 대책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속하도록 자산형성 유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력이 유입되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청년과 중소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아서 2017년에 4만여 명, 2018년에는 11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9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7만여 명의 순채용을 기록하였고, 올해에는 지원규모가 두 배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들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정확한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추가적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 유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기업이든 청년이든 특정 지원대상에게 일정기간(예로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수단을 통해 창출된 고용이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려면 최소한 정책수단 지원만큼의 임금·근로조건 개선분을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불가결하다.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2~3년의 지원기간 동안 구조개선 노력을 통해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임금지불능력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들 정책들이 당초 의도하였던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책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체계 및 생태계 구축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청년일자리대책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청년고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불가결하고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메워주는 한시적인 청년고용대책들이 불가피하며,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정책, 공정경제정책과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의 마중물 효과와 시너지를 배가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고용대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공정경제 정착 및 민간부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현장경쟁력 강화 및 일터혁신 확산, 교육체계 개혁, 중소기업·산업정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KL**